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南대북 비방중상 진상공개장'... "단호히 대처"(4/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발표한 '진상공개장'을 통해 남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북한의 '자위적인 핵무력과 미사일 무력',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헐뜯고 '인권소동', 대북 전단살포에 매달렸으며 '급변사태설'과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으로 '체제통일'의 '흥심'을 드러냈다고 하며 "박근혜야말로 비방중상의 왕초이고 주범"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조평통이 "결정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어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2의 천안호 사건을 날조해낼 흥심을 드러냈다"고 한 주장을 전함.

- **北 김일성 생일 맞아 김정은 '인민사랑' 부각(4/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영원히 인민들 속에서'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전사들과 인민들 앞에서는 더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아버지"였던 김 주석의 면모를 칭송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대를 이어 '이민위천(以民爲天·백성을 하늘같이 소중히 여긴다)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이념을 한 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이 있어 북한 주민들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함.

- **北 김일성 생일 중앙보고대회...(4/14, 조선중앙TV;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TV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2회 생일(태양절)을 하루 앞둔 14일 대규모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고 밝힘.
 - TV는 보고대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최태복·김기남·강석주·김평해·박도춘·곽범기 노동당 비서, 김용진·로두철·리철만·리무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김일성 생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102회 생일(태양절)인 15일 0시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김동화 군 중장 등이 동행함.

- **北 김일성 생일...김정은 유일영도 강조(4/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사상과 노선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다"고 밝힘.
 -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사상도, 영도도, 품모도 백두산 위인들(김일성과 김정일) 그대ροι이신 천출위인"이라며 "전 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주체혁명 위업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제일중대사"라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백두의 혈통을 영원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 **北 기록영화서 김경희 모습 삭제...'흔적 지우기' (4/16, 조선중앙TV;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15일 오후 김 제1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건립 업적을 다룬 기록영화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만대에 빛내이시려'를 재방송하면서 김경희 당 비서가 나왔던 장면을 빼고 기존에 없던 다른 화면을 대체하여 보도함.
 - 2013년 12월 13일 처음 방영된 이 기록영화에는 김경희 당 비서가 2012년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 때 검은 상복을 입고 김정은 부부,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참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나 이번 재방송된 영상에서는 이 장면이 빠지고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화면으로 대체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는 기록영화에서 김 당 비서뿐 아니라 장성택의 측근으로 최근 평양시 당 책임비서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된 문경덕이 나오는 장면도 삭제되었다고 전함.

- **통일부 "김경희, 당 직위 물러난 것으로 추정"(4/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7일 보도를 통해 통일부가 북한이 김경희 당 비서의 모습을 기록영화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김경희가 당 관련 직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숙청까지 갔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음을 전함.

- 신문은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 기록영화는) 2013년 12월13일 최초 방송 이후 올해 1월4일, 1월5일, 2월16일, 4월15일 등 4회 추가 방영됐는데 2월 16일 이후에는 김경희 장면이 대체됐다"고 보도함.

● **北 '실세' 황병서 당 제1부부장, 대장 승진(4/20, 연합뉴스;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세로 꼽히는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상장(별 3개)에서 대장(별 4개)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이 20일 게재한 제1차 비행사(조종사)대회 사진에서 황병서가 어깨에 대장 계급장을 달고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으며, 그는 지난 15일 열린 비행사대회의 주석단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왼쪽 두 번째 자리에 군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김정은, 전군 조종사대회서 한미공중훈련 비난(4/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이 4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로 전군의 모든 조종사가 참가한 제1차 '비행사대회'를 열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들이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을 벌여놓은 데 이어 또다시 연합공중훈련이라는 불장난질을 벌여놓음으로써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며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밝힘.
- 그는 또 "조선반도의 남쪽 상공에 제국주의 쉬파리떼가 덮여 있는 험악한 정세 속에서 조국의 영공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배짱과 담력의 승리, 기개의 승리"라고 주장함.



■ 김정은 동향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전국 육아원·애육원들에 식료품들·의복류 전달 찬양 반향(김성옥, 남포시 육아원 의사) 보도(4.15, 중앙방송)
- 4/14, 김정은 黨 제1비서, 시리아 대통령에게 독립 68돌 즈음 축전(4.16, 중앙통신)
- 北, 4월15일 09시 김정은 黨 제1비서(개회사/개.폐회선언)가 참가한 가운데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진행(4.20,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영길(보고), 장정남, 서흥찬, 황병서, 리병철, 장동운 등 참가
- 김정은·리설주, 4월 16일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관람(4.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4월 17일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4.20,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영길, 장정남, 서흥찬, 황병서, 리병철, 장동운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방송대학 제48기 개학식, 4월 14일 양형섭(김일성방송대학 학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4.14, 평양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4월 14일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을 위해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 마련(4.15, 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 4월 14일 김기남(당중위 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4.15, 중앙통신)
- 김영남, 4월15일 멕시코 노동당 전국지도자·김일성-김정일기념이사회 공동이사장·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이사장·러시아 신문 '자브트라' 책임주필과 면담(4.15, 중앙방송·중앙통신)
- 인민군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와 중앙·지방의 극장들에서 경축공연(음악회·연극 등)과 각지 근로자들의 체육·유희오락경기 등"태양절을 뜻 깊이 경축했다"고 선전(4.15, 중앙통신)
- 김영남·박봉주·장정남·김기남(연설) 등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해외동포 대표단 당장 등 참가 및 주북 외교·국제기구 대표와 무관부부들을 초청한 가운데 4.15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일성 생일(4.15, 태양절)경축 연회 진행(4.16, 중앙통신)



나. 경제

● **지안-평양관광 12년 만에 재개... 북중관계 변화오나(4/14, 신화통신;이주주간(亞州周刊))**

- 신화통신은 13일 중국인 관광객 32명이 열차를 타고 지린성 지안(集安)을 출발함으로써 이 관광코스가 재개통된 것에 대해 지안시 정부와 북한 국가관광총국, 자강도 만포시 인민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보도함.
- 이주주간(亞州周刊)도 지린성 공안 변방총대를 인용해 이번 지안-평양 관광코스 운영 재개가 북한 측 요구로 이뤄졌다고 전함.
- 또 이주주간은 지난 1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평양 국제열차 운행 60주년을 맞아 단둥시 정부는 북중 간 기념식 공동 개최를 원했지만 끝내 열지 못하는 등 양국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 보도함.

● **"중국, 북한 주민에 취업비자 발급 제한"(4/15, 아사히(朝日)신문)**

- 아사히신문은 양국 무역중개업자들을 인용, 작년 여름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年)단위 장기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올 2월부터는 단순 노무자에 대한 단기 취업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됐다고 전함.
- 신문은 또 중국이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北 "포전담당제 성과"...제도 안착에 주력(4/16, 연합뉴스;조국)**

- 연합뉴스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4월호가 지난해 북한의 농업 부문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제가 실시돼 알곡 생산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됐다고 평가한 보도를 전함.
- 뉴스는 조국 4월호를 인용해 "포전담당제를 도입해 성과를 낸 모범 사례로 평안남도 원화군 원화협동농장을 들었으며 이 농장은 포전담당제 이후 책임감이 강화돼 모범단위인 3분조의 경우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1인당 평균 1톤의 생산물을 현물로 분배했다"고 전함.

● **북한, 장성택계열 '승리무역'해산·재편중(4/16, 요미우리(讀賣)신문)**

-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생전 장악하고 있던 '승리무역회사'가 해산된 뒤 현재 재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 16일 보도함.
- 신문은 "회사가 대부분 군에 귀속됐으며, 일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실로 옮겨졌으며 승리무역회사 간부를 교체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사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 **北내각 확대회의 개최... "농업에 역량 집중"(4/18, 민주조선;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 입수한 민주조선 4월13일지를 인용해 박봉주 총리, 로두철 국가계획위원장 겸 부총리 등의 경제 간부들이 참석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함.
 - 민주조선은 "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위한 투쟁에서 주타격 방향인 농업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며 수산 부문에 힘을 넣을 데 대한 대책적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됐다"고 전함.

- **북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안간힘'(4/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이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북한은 노동절 연휴를 전후해 본격화하는 중국의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장기간 중단했던 중국인 상대 관광코스를 다시 열고 '테마형 관광' 같은 신상품을 내놓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자국과 접경한 지린성 여행사들을 통해 나선시 일대를 둘러보는 3일짜리 자가용 관광 상품 판매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러시아 하원, 북한 채무 11조원 중 90% 탕감 승인(4/19, 연합뉴스)**
 - 러시아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채무 108억 달러(약 11조3천억원) 중 90%를 탕감하는 협정을 비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협정은 북한과 러시아가 2012년 9월 17일 맺은 것으로 북한이 옛 소련 때 졌던 채무 중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0%인 10억 9천만 달러는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이 골자이며, 북한의 채무 상환금을 러시아와 북한의 공동 투자 사업에 쓴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예성강청년4호발전소 건설이 '마감단계(총 공사량의 85% 수행)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선전(4.17, 중앙통신)
- 전국 각지의 논갈이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배 증가, 500여만 톤의 비료 생산 등 선전(4.18, 중앙방송·노동신문)
- 흥건도간석지 건설장, 4월 18일 25만산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4.19, 중앙방송)
- 자강도 임업관리국, 연간 통나무 생산계획 완수(4.20, 중앙방송)
- 상원군, 2층 도서관 새로 신설(4.20, 평양방송)



다. 사회·문화

● 北 마라톤대회서 쌍둥이 자매가 1, 2위(4/1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해 지난 13일 개최된 만경대상마라톤대회에서 쌍둥이인 김혜경-김혜성 자매가 우승과 준우승을 휩쓸었다고 전함.
- 또 "쌍둥이 마라톤 선수들의 다음 목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소개함.

● 北, 평양관광대 신설...관광 인재 육성 노력(4/1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이 관광 인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평양에 관광대학을 만든 것과 관련하여 이날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평양에 관광대학이 설립되고 각 도의 사범대학에 관광학부가 신설됐다"고 전함.

● "北, 세계기상기구에 실시간 기상정보 불성실 제공"(4/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MO)에 가입한 북한은 북한지역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3시간 간격으로 WMO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실시간으로 수집하지 않은 오래된 기상정보를 간헐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고, 이것마저 수시로 누락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도함.

● "北, 세계탁구선수권 도쿄대회 출전"(4/17, 조선신보)

- 북한이 4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하는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고 조선신보가 17일 밝힘.
- 조선신보는 또 북한 선수단은 주장철 조선탁구협회 서기장을 비롯한 임원 및 코치 5명과 남녀 선수 각각 4명 등 모두 13명이고 선수단에는 작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김혁봉(남)과 김정(여)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함.

● 北 방송 "평양과 황해도 심한 봄 가뭄"(4/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7일 '가물(가뭄)통보'를 통해 "봄철에 들어와 서해안 중부 지방에서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심한 가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약 두 달 동안 황해남북도의 평균 강수량은 3.1mm로,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기상 관측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양도 지난 3월 29일 비가 6mm내린 이후 끊겼다며 "1982년과 유사한 가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함.



● 北, 월북작가 한설야 칭송..."수령소설 선구자"(4/20, 연합뉴스;사회과학원 학보)

- 연합뉴스가 20일 입수한 북한 계간 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2월 15일 발행)는 「한설야와 장편소설 '역사」 라는 글에서 한설야의 이력과 문학세계를 소개하면서 그를 "수령형상소설 창작의 초행길을 개척한 선구자"라고 평가함.
- 사회과학원 학보는 한설야의 대표작으로 김 주석의 항일빨치산 투쟁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역사'(1953년 작)를 소개하면서 한설야가 이 장편소설에서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영군술, 숭고한 후대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의 불멸의 위인상을 감명 깊게 형상하였다"라고 높이 평가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청년학생들 경축무도회, 4월 15일 평양체육관광장·개선문광장 등 평양 시내 무도회장들과 각 도소재지·시·군들에서도 진행(4.15, 중앙방송·중앙통신)
- 국제육상연맹-제27차 만경대상 마라톤경기 대회 참가 외국 선수들(나미비아·남아프리카·짐바브웨·우크라이나·스페인·이집트·에티오피아·케냐·중국·중국대북·르완다·우즈베키스탄·마다가스카르), 4월 15일 귀국(4.15, 중앙방송·중앙통신)
- 제29차 4월 봄 친선예술축전(4.11~17) 폐막식, 4월 17일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한철(문화성 부상/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4.17, 중앙통신·중앙방송)
- 포평혁명사적관(양강도 김형직군) 창립(64.4.15) 50주년 기념보고회, 4월 17일 진행(4.17, 중앙통신)
- 김정일 지시(4.18, 학교들에서 일정한 체육종목 전문화) 4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4.18 청년중앙회관에서 김승두(교육위원장)·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4.19,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세계 고대 유적의 날(4.18)'을 맞아 조선도시연맹 주최로 토론회 진행(4.19, 중앙통신)
-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공연, 함흥대극장에서 연일 성황리 진행되고 있다고 선전(4.19, 중앙방송)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日, 中다렌서 극비협의를…납치재조사 합의임박"(4/15, 산케이(産經)신문)

 - 산케이신문은 15일 북한과 일본이 지난 12~13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과장급 극비협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과 북한의 과장급 당국자가 나선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의 안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조치의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정을 진행했다고 전함.

- 北, 한미공중훈련 또 비난…"무자비한 징벌" 위협(4/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보도를 통해 한미 공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종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거듭 반발하며 "무자비한 징벌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함.
 - 신문은 또 "지금 내외 호전광들은 그 무슨 '북의 핵시험 위협'과 '무인기 침투' 등에 맞서기 위해 맥스선더 연습의 강도를 높였다고 떠들고 있다"며 무인기 침투가 북한 소행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날조라는 주장을 반복함.
 - 또한 "무인기 침투니 뭐니 하는 것도 제2의 천안호 사건 조작으로 다시 한 번 북남관계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유치한 음모"라며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최강도로 감행하여 전쟁도발 준비를 완성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한갓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함.

- "최소 9개 안보리 이사국이 北인권 ICC회부 찬성"(4/17,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데 적극 찬성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뉴스는 당사국인 북한은 회의장에는 나오지 않는 대신 외교관을 보내 회의장 밖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밝힘.

- 北신문 "美, 對北 모략선전 극단에 이르러…용납못해"(4/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선전 공세를 최근 극도로 강화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이 선전 공세를 강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제재압살 책동'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최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일 접촉에 대해서도 "대조선(대북) 포위망이 붕괴될 것 같아 안달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의 선전 공세를 물리치기 위한 정치사상적 '공격전'을 독려하며 "미제가 반공화국 모략선전을 아무리 너절하고 악랄하게 벌여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 北외무성 "안보리 北인권 논의는 체제 허물려는 것"(4/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노린 '반북 인권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은 유엔 헌장에 규제된 권능에도 어긋나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의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궁극에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함.

■ 기타 (대외 일반)

- 美 '워싱턴포스트(WP)'의 기사(美 국가안전보장국 다른 나라의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한 달간 녹음·재생 가능)를 인용하며 "미국의 비열한 정탐행위는 인권유린과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며 "미국이야말로 세상 가장 못된 짓만 골라하는 악의 나라,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비난(4.14, 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근 중국위인납상관(偉人蠟像館)의 장모레이(章默雷)관장에게 인민예술가 칭호를 수여(4.14, 환구시보)
-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김정은을 '명예위원장'으로 임명(4.14, 중앙통신)
- 방북(4.14) 프랑스 AFP통신사 대표단(단장 : 필립 마소네 부사장), 4월 15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미림승마구락부·문수물놀이장 참관(4.15,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기남(당중앙위 비서), 4월 14일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단장 : 오가미 겐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담화(4.15,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4월14일 니카라과 대통령(다니엘 오르테가 사베드라)에게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 위문 전문(4.15,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리수용(외무상), 4월 14일 시리아 독립 68돌 즈음 同國 내각 수상과 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에게 각각 축전(4.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이란 대사관 무관, 4.18 '이란 군대절' 즈음 오금철(軍 상장)등을 초대한 가운데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개최(4.18,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4월18일 짐바브웨 대통령에게 독립 34주년 축전(4.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의 '2014년 외교청서' 내용관련 '군국주의 우경화정책으로 초래된 외교적 고립탈피, 군국주의 해외팽창야망 실현을 위한 조건 마련'이라고 비난(4.18,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외무성 대변인, 4.18 「중통」 대답을 통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反北 인권소동감행'을 비난하며 이는 "우리(北)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목적이라고 주장(4.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조선인대표단(단장 :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 고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등 참관(4.19,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문화전람회(4.18~28), 4월 18일 조선대외전람총국과 中 광동성 주해시 문학예술계연합회·주해시 화원의 공동주최로 광동성 주해시에서 개막(4.20, 중앙통신)
- 재중조선인연합회,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2주년을 즈음하여 중국 지린성 육문중학교에서 경축행사 진행(4.20, 중앙통신)
- 러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쥘리놉스키, 4.11)·네팔 공산당 중앙위 위원장(잘라나트 카날, 4.11)·우루과이 3월26일운동 위원장(루벤 마리아 베라, 4.12), 김일성 생일을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각각 축전(4.20,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4월 17일 말리 수상으로 임명된 '무사 마라'에게 축전(4.20,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조평통 "무인기 사건은 '제2의 천안함 날조'(4/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얼토당토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하여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조평통은 또한 "남조선 보수패당의 비열한 반공화국 비방중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 강조함.
- 北 '무인기 사건' 잇단 반박···南에 공동조사 제의(4/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4일 국방위 김열단 이름으로 「무인기 사건의 '복소행실'은 철두



철미 '천안호'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하고 남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 신문은 진상공개장이 "천안호"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소행'관련 사건들을 공동조사하지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상조사에는 남조선의 국가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남측을 대표하여 나오면 될 것"이라 주장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또한 국방위원회가 진상공개장을 통해 국방부가 무인기 배터리에 '기용날자' 등의 북한말이 적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품에 '기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조선말대사전에는 애당초 '기용'이라는 단어의 해석조차 없다"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北역류 선교사 김정욱씨 또 인터뷰... "국정원과 협력"(4/15,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평양방송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국정원에서 저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황당한 행태"라고 전했음을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신문은 또한 김 씨가 이번 인터뷰에서 국정원 간부가 먼저 자신을 찾아와 협조를 요구했다며 "국정원이 선교사들을 협조자로 이용하고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흡수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음을 밝힘.

● **北 매체, 정부 무인기 공동조사 거부 비난 (4/1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을 '대남심리전'으로 간주해 거부한 데 대해 '악랄한 비방중상'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우리민족끼리가 "만약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소동이 모락이 아니라면 우리의 요구대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면 될 것"이라며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함.

● **北, 차대통령 '남재준 두둔' 비난... "남북관계 파국"(4/17,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7일 서기국 보도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했다며 "이제 남조선이 파쇼와 폭압이 더욱 판을 치는 암흑천지로 전락되고 북남관계가 보다 엄중한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파쇼 탄압과 동족 대결의 총본산인 정보원을 해체하고 남재준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함.



- **"남북관계 갈림길…南, 중대제안에 응해야"(4/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8일 남북관계가 대화와 파국의 갈림길에 섰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등을 요구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함.
 - 신문은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비방·중상을 그만두는 것, 동족을 해지려는 외세의 침략 행위에 가담하지 말며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 조선반도 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협조하는 길에 나서는 것이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해 남조선 현 집권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 강조함.
 - 또 "조선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인해 조선반도에 다시금 대결과 전쟁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 참화를 몰아올 수 있는 흡수통일에 대한 망상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조선신보는 비난함.

- **〈여객선침몰〉北, 첫 보도…南 정부 간접비난(4/18, 조선중앙통신;우리민족끼리)**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학생과 교사 등 470여명이 탄 세월호가 지난 16일 침몰했다면서 "사고로 사상자들이 났고 수백 명의 생사를 알 수 없으며 침몰된 여객선을 끌어올리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고 전함.
 - 또 남한의 한 방송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이 품었을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정부'당국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며 남한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난함.

- **北신문 "독수리 훈련으로 남북관계 파국…책임져야"(4/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남한과 미국이 독수리(FE) 합동군사연습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에 빠뜨렸다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신문은 독수리 연습 종료 하루만인 19일 '긴장격화, 북남관계 파국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의 핵전쟁 위험 속에 몰아넣고 북남관계를 다시금 최악의 파국 상태로 끌고 간 범죄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격화시키는 도발자'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해온다면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경고함.



- **北신문, 4·19 맞아 반정부·반미투쟁 선동(4/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4·19의 항거정신은 대중적인 항쟁을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의 정치 정세는 반독재 민주화의 불길이 타올랐던 50여년 전의 4·19 인민봉기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이 제2의 4·19 인민봉기로 독재정권의 반역통치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갈 의지에 넘쳐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힘.
 - 신문은 정부가 "유신독재의 정보정치, 공포정치를 부활시켰다"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드레스덴 선언과 같은 대결 계책을 내놓고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함.

- **北 매체, 한미훈련 후 한반도 정세 변화설은 "귀변"(4/2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종료되고 나서 북한이 대화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남한에서 나온다고 하며 이를 "사태의 본질과 초보적인 현실감각마저 결여된 파렴치한 귀변"이라고 지적함.
 - 논평은 험악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파국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비롯됐다고 하며 "괴뢰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끝났으니 북남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떠는 것 자체가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침몰 몽골선적 화물선 北선원 시신구 추가 송환(4/14,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이 11일 오후 판문점과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보낸 사진 속 인물이 북측 선원이라고 확인했다"며 "오늘 오후 2시 판문점에서 시신을 넘긴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경기도 '개성한옥'보존 위해 北민간단체 중국서 접촉(4/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보도를 통해 경기도와 문화재단 관계자 5명이 통일부의 사전 접촉 승인을 받아 지난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을 방문, 북한 민간단체 관계자를 만났다고 밝힘.
 - 경기도가 한옥 보존 사업을 위한 공동 학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보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나 더 지켜보자"라고 답했다고 뉴스는 전함.

- **정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방북 승인(4/20, 연합뉴스)**
 - 통일부는 20일 "코레일 사장과 실무진 등 5명의 방북을 승인했다"며 "방북 목적은 4월24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



도함.

- 통일부는 "금번 방북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회의에 제후 회원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북을) 승인했다"며 "이번 방북을 통해 코레일과 OSJD 회원국 간의 철도 협력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기타 (대남)

-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北, 비방과 도발중지 약속 파기·내부불안 등)에 대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의 비방·중상 책동으로 남북관계는 파탄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4.17, 중앙통신)
- 韓美의 '맥스썬더' 연합훈련은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며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우리(北)가 핵 억제력 강화를 포함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4.17, 중앙통신·노동신문)
- 4·19혁명 54주년 관련 '지금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의 정보정치, 공포정치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미국의 대조선 지배전략과 그에 적극 추종하는 괴뢰통치배들의 매국반역정책에 의해 4·19 봉기자들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 및 반정부·반미투쟁 선동(4.1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국방위 검열단 진상공개장(4.14) 관련 우리 국방부 발표 및 北의 핵위협과 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美·日과의 대북 공조체제 강화에 대해 '무인기 사건을 구실로 남북관계를 풍비박산내고 美·日 상전과 결탁하여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트리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책동'이라고 비난(4.20, 평양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中 6자수석 워싱턴 '3차 회동'...6자 '재개조건' 타진(4/18, 연합뉴스)**
 -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4~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의 2차례 회동 후 17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3번째 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조건 조율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 양국은 이번 연쇄 회동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 언급 이후 북한내 정세변화와 함께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 등을 집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내부적으로 여러 얘기가 오갔을 수는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인 현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나. 마북 관계

- **北 불법경제활동 실상 파악 점점 어려워져(4/16, 연합뉴스)**
 - 15일(현지시간) '외화 획득을 위해 진화하는 북한 정권의 활동'이란 주제로 열린 브루킹스 연구소 토론회에서 "위조지폐 유통이나 마약 판매 같은 북한 정권의 불법 경제활동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왔음.
 - 브루킹스연구소의 그라이튼스 선임연구원은 "지난 2005년 이후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마약이나 위조품 판매 같은 불법적 방법 이외에도 개성공단 운영, 관광객 유치, 북중무역, 탈북자 송금 같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북한으로 외화가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중독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예로 들며 "북한 내부에서의 불법적 경제활동으로도 북한 정권이 재화를 획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불법적 경제활동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함.
 - 이어 그는 북한 경제가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북한의 불법 활동 제재를 위해서는 더 정교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다른 전문가들 역시 몇 가지 정책이나 현상만으로 북한 경제의 변동 양상 파악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



- **美 대화-압박 '투트랙'...오바마 순방 '상황관리'(4/16, 연합뉴스)**
 - 오는 25~26일 벉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일정을 확정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는 안보공조를 주도하며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며 북한을 향해 '투트랙'(Two-track) 대응을 꾀하고 있음.
 - 여전히 대응의 방점은 '압박'에 놓여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낮추는 쪽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며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전술적 차원을 넘어 전략상의 변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이 적극적인 대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북한은 갈수록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략적 인내' 기조로 대변되는 대북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은 6자회담 재개를 낙관하기 힘든 '살얼음판 국면'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이며, 특히 빅터 차 CSIS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이후 5월쯤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북한 주민에 취업비자 발급 제한<아사히>(4/15,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15일, 중국이 작년 여름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年) 단위 장기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올 2월부터는 단순 노동자에 대한 단기 취업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이에 대해, 중국이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 차원에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친중파였던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신도 그 배경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음.
 - 이는 중국으로의 근로자 파견을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는 북한 정권에 타격이 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월 중·북간 무역 총액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4% 감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라. 일북 관계

- **日北, 中다렌서 극비협약...납치재조사 합의 임박(4/15, 연합뉴스)**
 - 산케이 신문은 15일, 일·북이 지난 12~13일 중국 다렌(大連)에서 극비 협약을 가졌다고 보도하며 북한은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의 안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조치의 일부 해제 방안 등에 대해 최종 조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 또한 일본은 북한이 재조사에 응할 경우 북한 국적자에 대한 인적왕래



금지 조치와 북한 전세기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의 제재 해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달 중 국장급 협의를 열어 납치 문제 재조사 실시에 합의할 전망이다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음.

- 앞서 일·북 양측은 지난달 30~31일 중국 베이징에서 1년 4개월 만에 정부 간 공식 협상(국장급)을 재개한데 이어 지난 5~6일 중국에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부총리 곧 방북"...경제협력 논의할 듯(4/16, 연합뉴스)

- 16일 '러시아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곧 북한을 방문해 극동지역 개발을 포함한 양측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가 최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린 북한 대사관 연회에서 밝힌 것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을 시작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김 대사는 "러시아와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 강조했으며, 앞서 지난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올해 북러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바. 기타

● 중견국협의체 '믹타' 5개국 "北 추가도발 중단 촉구"(4/15, 연합뉴스)

-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는 13~14일 (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의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음.
- 또한 북한에 대해 우리측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의 약속 준수를 요구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국제 현안,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음.
- MIKTA는 비슷한 가치와 입장을 가진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가 국제사회 이슈에의 공동 대응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설립됐으며, 9월 유엔총회와 11월 호주 G20 정상회의 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정상 3번째 만남…북핵·동맹강화 주요의제(4/15, 연합뉴스)**
 - 오는 25~26일 방한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는 양국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복원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 태세의 유지 및 미국의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 재확인,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확고한 지지 표명 등을 통해 북한에의 비핵화 압박 및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힘쓰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 문제'의 논의 여부도 주목되고 있으며, 방한 직전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조치의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韓美, 전작권 재연기 이후 전환시기·조건 협의 착수(4/16,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전작권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적절한 전환 시기와 조건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양국의 공동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17일자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나. 한중 관계

- **中, 양국 6자수석 회동서 韓에 한미훈련 자제 촉구(4/14, 연합뉴스)**
 - 14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우리 측에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 중 하나"라며 한미 연합훈련 자제를 요청했으나 우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이 6자회담 채널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



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또다시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당분간 6자회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 수준과 관련, 중국 측은 "한·미·일의 요구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 측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차단을 실현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다. 한일 관계

-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영어·일어판 소책자 또 제작(4/15, 연합뉴스)**
 -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제작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10쪽 분량의 소책자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했다고 전했다.
 - 영어와 일본어로 게시된 책자는 "독도가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보든 국제법으로 따지든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제법을 통해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앞서 일본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10개 외국어로 된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정세' 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들에 대해 한국 외교 당국은 아베 내각의 영유권 주장 명확화를 통한 일본의 주장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음.
- **한일, 대화채널 복원...관계 정상화까지는 먼 길(4/17, 연합뉴스)**
 - 16일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중단됐던 외교 당국 간 대화가 본격적인 재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 당장 위안부 협의 정례화 차원에서 양국의 실무 사령탑인 담당 국장들이 사실상 매달 대면하게 되었고, 협의의 분위기에 따라 차관급 전략 대화 등 기존 채널이 복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로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해결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만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외교 당국자는 전했다.
- **아베, '군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재확인(4/18,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회가 시작된 가운데, 아베 총리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 수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군 위안부 강



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재차 거론했음.

- 또한 "나는 지난 선거(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각의(국무회의) 결정과 고노담화는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내가 그동안 발언해온 덕에 이제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알게 됐다"고 부연했음.
- 이외에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무한한 희생을 한 영혼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평화헌법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섯 번 수정하는 동안 일본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개헌 강행을 예고했음.

라. 미·중 관계

● 중국, 미국 고위관리 대만 방문에 반발(4/15,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15일, 지나 맥카시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환경보호청장의 대만 방문은 중·미간 3개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대만과는 어떤 형태의 정부간 교류도 중단'한다고 한 약속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음.
- 미국의 각료급 인사가 대만을 찾은 것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2000년 로드니 슬레이터 교통장관 이후 14년 만으로, 맥카시 청장은 마잉주 대만 총통을 예방하고 환경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오바마 방일기간 동중국해서 대규모 군사훈련(4/18, 연합뉴스)

- 중국군이 오는 23~25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전례 없이 큰 규모로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중국 대하망(大浬網)이 18일 일본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음.
- 제임스 파넬 미 태평양함대 정보참모실 차장도 중국의 이런 훈련을 예상하면서 이는 "전격전을 통해 센카쿠의 신속한 점령을 위한 것"이라 설명, 그는 지난 2월에도 중국이 군사작전 '2013 행동계획'에 따라 센카쿠 탈취 전쟁 훈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한편 대하망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이를 계기로 아시아지역에서 주권 분쟁을 둘러싼 정세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 미·일 관계

● 아베 美초당파 의원 접견 "미일, 동맹강화 중요"(4/14, 연합뉴스)

- 14일 교도통신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



서 바버라 미켈스키 상원의원(민주당) 등 민주·공화당 의원 약 20명을 면담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은 아주 어려워지고 있어 미일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시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동맹이 수행해 온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 미국 의원단은 미일동맹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관계라 평가하고 이란 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본이 기울인 노력에 감사한다는 뜻을 표명했음.

● 일본, 미사일 핵심부품 미국에 수출<닛케이>(4/17, 연합뉴스)

-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17일, 무기수출의 족쇄를 풀 일본이 미국에 미사일 핵심부품인 고성능 센서를 수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무기 수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며, 아베 총리 및 오노데라 방위상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에서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한 안보 강화 등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이번 수출은 전환 후 첫 번째 무기수출 사례가 될 것임.

● 美, 미일정상회담 성명에 센카쿠 명기 난색<교도>(4/19, 연합뉴스)

-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오는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공동성명에 미국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방어 약속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일본 측 제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음.
- 미국 측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센카쿠를 명기하지 않고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지역은 미국의 대 일본 방어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표현을 요구, 센카쿠를 둘러싼 미일간의 미묘한 온도차가 부각된 양상이라고 교도는 분석했음.
- 아베 총리는 18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공헌하는 미일 동맹을 국내외에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 마러 관계

● 러 전투기, 美 구축함에 12차례 근접 '도발 비행'(4/15,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를 순찰 중이던 미 구축함에 대해 수차례 도발성 비행을 해 자칫 양국 군 간 충돌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미 국방부가 14일 밝혔음.



-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 한 대가 흑해 공해상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도널드 쿡에서 거리상으로는 900m 이내, 고도상으로는 해상 150m 지점까지 근접했으며, 해당 전투기에 수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러시아 전투기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에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은 국제조약 및 양국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 해군 호위함이 미 군함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밝혀 흑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중왕양 부총리, 日고노 전 관방장관 만나 아베 비판(4/15, 연합뉴스)**
 -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는 15일,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관방장관을 만나 "지금 아베 정권의 태도는 (중일 관계에) 많은 유무형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며 아베 내각을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이에 고노 전 장관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리야마 담화를 계승해 온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앞으로 전후 질서가 붕괴하지 않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니 꼭 신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음.
 - 그러나 왕 부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은 양국의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 무역과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정부 간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음.
- **중국, 도쿄 도지사 방중에 이례적 '기대감' 표시(4/15,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6일, 일본 마스조에 요이치(舂添要一) 도쿄 도지사의 방중계획(24~26일)에 대해 "베이징과 도쿄의 우호적인 교류를 한결같이 지지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기대감'을 표시, 양국의 관계개선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일본 측 주요 인사의 방중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은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줄곧 강경자세를 유지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일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중국은 작년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직후 양국의 교류 등을 연기·취소했으나 최근 전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 후더핑 전 정협 상무위원의 아베 총리 면담이나 왕양 부총리가 고노 전 일본 관방장관을 만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음.



아. 중·러 관계

- **중·러 외무장관 회담…우크라이나·한반도문제 논의(4/16,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및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 중국 외교부는 "중·러 양국은 세계와 지역의 평화·안보·안정을 수호 하는데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긴장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러시아 측에 완곡하게 요청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에 대한 강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 등을 집중 부각하며, 러시아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측면지원'을 강하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자. 일·러 관계

- **日정부 '기시다 외무상 방러 연기'…러시아 확인(4/17일, 연합뉴스)**
 - 일본은 17일, 오는 23~25일 벵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관련,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이달 중으로 예정했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 당초 기시다 외무상은 오는 28~2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담에 맞춰 세르게이 외무장관과 회담할 계획이었으며, 러시아 측도 "이 기간에 개최예정이었던 러일 통상경제 정부간위원회 연차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 기타

- **전세계 군비지출 2년째 감소…美↓, 中·러↑(4/14, 연합뉴스)**
 -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세계 172개국의 군비 지출 총액은 약 1조7천47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9% 감소했으며, 3대 군비 지출국 중 미국을 제외한 중국과 러시아는 지출을 늘렸음.
 - 지역별로는 서방 국가는 군비 지출을 줄인 반면 아프리카(8.3%), 아시아(3.6%), 동유럽(5.3%), 중동(4%), 남미(2%) 등은 지출을 늘렸으며, 특히 중국은 지난 10년 새 군비가 170% 증가해 같은 기간 GDP 성장률(140%)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음.
 - 군비지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23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급속한 경제성장 달성', '석유·가스 수출을



통한 수익 증가, '심각한 무력 분쟁 진행 중' 등 3가지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다고 SIPRI는 밝혔다.

- **아베 보좌관 "밀접한 국가 공격받으면 자위대 출동"(4/16일, 연합뉴스)**
 - 일본의 이소자키 요스케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은 16일,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이 허용되면 일본이 아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자위대가 출동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투입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으며, 일본 정부가 향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16일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가와이 자민당 중의원을 만나 미국 의회 관계자로부터 집단자위권 구상에 관한 찬동의 뜻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고 "미·일 동맹 심화 및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 정비에 미국의 지지는 매우 든든하다"고 반응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통신, 美 전화도청 비난... "인권유린 범죄"(4/14,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미국 정부가 외국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는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뒤늦게 비난함.
- 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화도청 기술에 관한 워싱턴포스트(WP)의 기사를 인용하며 "미국의 비열한 정탐 행위는 인권 유린과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주장했음.
- 앞서 지난달 18일(현지시각) WP는 국가안보국이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한 달간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논평은 또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전자간첩 행위는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휴대폰 단속 피하자" 유료 '전화 서비차' 등장(4/14,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 당국의 불법 중국 휴대전화 단속이 강화되자 국경일대에는 외부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돈을 받는 일명 '전화 서비차'가 등장함.
- 함경북도와 양강도 국경일대 사정에 밝은 한 북한 주민 소식통은 북한 보위부가 신형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지난 3월 초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전후해 새로 도입한 전파 탐지기는 성능이 좋아 휴대 전화를 거는 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한바 없다고 덧붙였다.
-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과 전화를 하자면 보통 도심에서 30~50리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전화 서비차들은 한탕 봉사를 해주고 인민폐 200~300위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화 서비차 주인들은 어느 지역에서 통화가 잘 되고 또 안전한지를 미리 알고 있으며, 전화 신호가 잘 터지는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양강도 지방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는 미국에 정착한 한 탈북 여성도 이번처럼 단속이 길어지기는 드문 일이라면서 외부 지원에 의존해 사는 탈북자 가족들이 북한 보위부의 집중 감시대상이 되었다고 말함.
- 북수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당국이 이처럼 단속을 강화하면 외부에서 들



여기는 비공식 외화통로가 막히면서 시장의 외화유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음.

● 북 관료 180명 '국제 경제 경영' 연수(4/14, 자유아시아방송)

- 싱가포르에 기반한 대북 교육 교류 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는 북한의 평양뿐만 아니라 강원도 원산에서 정치, 경제 실무 관료 및 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제 특구 개발, 투자 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 개발 등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열었다고 밝힘.
- 조선 익스체인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4번의 북한 내 세미나와 1번의 해외 세미나를 열어, 이를 통해 총 180명의 북한 연수생들이 배출됨.
- 이 기구는 원산의 동명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보 기술(IT) 연구를 상업용도에 맞게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북한 관료들이 정보 기술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연구 자체를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함.
- 또 지난 2월 강원도 원산에서 영국의 건축 및 도시 설계사인 깬빈 추아 씨를 초청해 관광 지역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연 바 있음.

● "북 주민 통신원 통해 실상 보도"(4/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내부의 소식을 북한 주민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직접 취재하고 보도해,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독특한 언론매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행사가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됨.
- 14일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북한의 내부(Inside North Korea)'라는 주제의 강연회에 초청된 일본의 언론매체 '아시아 프레스'의 오사카 사무소 대표 이시마루 지로 기사는 북한 곳곳에 파견한 북한인 기자들을 통해 현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식을 취재한 내용을 소개함.
- 이시마루 씨는 "몇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또 북한 당국에 요청도 했지만 외국인으로서 자유롭게 북한 소식을 취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대안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취재 기술을 알려주고 기사를 발췌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는 북한인 기자들은 보위부의 감시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 한다"고 설명.
- 이시마루 대표의 이번 미국 방문은 뉴욕의 자선재단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시마루 대표는 뉴욕에 이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임.



● 프랑스 AFP통신 대표단 방북(4/15,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 AFP통신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AFP통신 평양지국 개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필립 마소네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AFP통신 대표단이 지난 14일 평양에 도착해 방북 일정을 가짐.
- 북한 관영 언론은 대표단의 구체적인 방북 목적이나 일정 등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15일 이들이 평양 전승기념관과 문수물놀이장, 그리고 미림승마구락부 등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 AFP 측은 15일 대표단 방북과 관련한 문의에 즉각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이번 대표단은 방북 기간 평양지국 개설이나 특파원 파견 문제를 북한 측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던 엠마뉘엘 어그 AFP통신 회장은 당시 한국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평양에 지국을 건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음.

● 北역류 선교사 김정욱氏 또 인터뷰... "국정원과 협력"(4/15, 데일리NK)

- 북한에 역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가 북한 매체에 또다시 등장해 우리 국가정보원이 먼저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접근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힘.
- 김 씨는 이날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평양방송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저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역사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황당한 행태"라고 언급함.
- 그는 "국정원 직원이 단둥(丹東)에서 떠나기 전날 밤에 DMB, 소형 위성 TV 7대를 주면서 북쪽에서 나온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 밀수로 들어가게 하고 사용한 상태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했음.
- 김 씨는 북한이 작년 10월 초 자신을 체포한 뒤 4개월여 동안 정부의 신원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조사 과정에 저로부터 지하교회 교육을 받은 북쪽 사람 33명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그의 신원 공개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함.
-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씨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이 우리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김정욱 씨 신원확인, 가족·변호인 접견, 석방·송환 요구 등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음.
- 이어 "앞으로 정부는 김정욱씨 가족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김 씨의 조속한 석방·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음.



- "중국, 북한 주민에 취업비자 발급 제한"(4/15, 데일리NK)
 - 일본 아사히 신문은 15일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에 근로자를 파견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는 북한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年) 단위 장기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올 2월부터는 단순 노무자에 대한 단기 취업비자 발급도 원칙적으로 중단됨.
 - 이에 대해 중국인 중개업자는 "(북한 국적의) 기술자에 대한 비자는 발급되고 있지만, 공장 노동자에 대한 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랴오닝성 당국자는 "취업비자 발급에는 중앙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지방정부의 신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신규 비자발급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중국이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中 간섭성 훈수 "北인권 압박 줄이고 한미훈련 자제..."(4/16, 문화일보)
 - 중국은 지난 11일 베이징(北京)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에 이어 15~16일(한국시간) 뉴욕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국과의 접촉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자제와 북한 인권 압박의 강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 외교관례상 정도를 넘어선 훈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음.

- "北 불법경제활동 실상 파악 점점 어려워져"(4/16, 연합뉴스)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시나 체스트넛 그라이튼스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외화 획득을 위해 진화하는 북한 정권의 활동'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005년 이후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합법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 그라이튼스 연구원은 "마약이나 위조품 판매 같은 불법적 방법 이외에도 개성공단 운영과 관광객 유치, 북중무역, 중국으로의 노동력 수출, 탈북자 송금 같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북한으로 외화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중독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예로 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 경제활동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되어,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생겨나는 경제적 변화를 정권 주도의 제도 변화로 억눌러 왔다"며 "합자회사 설립 같은 일이 북한 경제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은 북한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예로 들며 "일부에서 휴대전화 보급이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북한 정권은 북중 국경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더 강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북한 불법활동 민간인 가담 늘어... 마약 사용도 확대"(4/16, 미국의 소리)

- 북한인권위원회(HRINK)가 15일 발표한 외화 획득을 노린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화 획득을 노린 북한의 불법활동에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고 있음.
- 북한 내에서 암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를 피하려는 북한 정권의 속셈도 한 몫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시기별로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는데, 우선 지난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정부 관리들이 외국에서 불법 생산된 물건들을 외교나 교역 관계를 악용해 판매했음.
- 200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약과 위조 달러, 가짜 담배 등을 불법 생산해서 범죄조직에 판매를 맡기는 형태가 주종을 이루면서, 불법활동의 지리적 범위도 범죄조직의 밀수 경로를 타고 확대 되는 양상을 보임.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속셈도 작용하면서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불법활동 개입이 줄어들고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보고서는 예를 들어 달러 위조의 경우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볼 때 북한 정권이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북한이 달러 위조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함.
- 북한 내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면서 불법활동의 지리적 범위는 북한 내와 북·중 국경지역으로 오히려 좁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중국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
- 보고서는 마약 판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국가가 중앙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하는 체제가 약화되고 대신 민간 생산자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체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이 같은 변화를 자세히 설명함.
- 북한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종류와 질도 전보다 더 다양해졌고 10kg 미만의 소량으로 포장돼 북한 내부와 북·중 국경지역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활동이 더 이상 권력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마약 거래에 가담하는 민간인들이 늘면서 마약 사용과 중독자들도 늘고 있어 북한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북한 당국이 법 집행과 치안의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공중보건과 교육,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북,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조류독감 보고(4/16,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북한이 16일 평양시의 소포과 하당 닭공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감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보고에서 '해당 질병의 반복된 발생'이라고 보고 이유를 밝혔다고 확산을 우려함.
- 북한 당국은 보고를 통해 지난 3월 21일 올해 처음으로 평양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H5N1형으로 수 만 마리의 닭이 폐사하고 살처분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는 현재 이 조류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매주 점검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
- 북한은 전국에 비상방역을 선포하고 발생 지역을 차단하며, 이동을 제한하고, 감염 조류들을 살처분 하는 등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음.
- 하지만 아직 국제기구의 지원이 없어 백신, 감염된 동물 치료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세계동물기구는 덧붙였다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이에 대해 아직 북한 당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다고 밝힘.

● 북, 인신매매 범죄 성행(4/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내에서 고리대가 성행하면서 북한의 가난한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약덕고리대업자들은 돈을 갚을 길 없는 여성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돈을 미끼로 가난한 여성들에게 매음행위를 강요하는 고리대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회령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여성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주었음.
- 고 씨 성을 가진 올해 23살의 여성은 가난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회령시의 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매음행위(성매매)를 조건으로 중국인민폐 3천원을 빌렸으나, 매음행위 과정에서 '6.27상무'의 단속에 걸려 보안부의 조사를 거쳐 3개월의 노동단련대 형을 선고받았음.
- 그러나 소식통은 이 과정에 매음행위를 강요한 고리대금업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더욱이 노동단련대 처벌기간 고씨 여성의 빚은 배로 늘어, 빚 갚을 것을 강요하던 고리대업자는 중국인민폐 7천원을 받고 고 씨 여성을 57살의 중국 화교 강 모씨에게 팔았다고 소식통은 전함.
-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그런 사례는 비단 고 씨 여성뿐만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에 있었던 회령시 인민위원회 보건부장의 사건을 폭로함.
- 올해 51살인 시 인민위원회 보건부장은 한 고리대금업자를 협박해 회령시 남문동 35반에 살던 24살의 이 씨 여성을 소개받아 경리원으로 끌어 들인 보건부장은 "그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다 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음.
- 이 사건은 보건부장의 패륜행위를 견디다 못한 이씨 여성이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꼬리가 밟히게 되었다고 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여성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매음행위를 강요한 깡패조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최근 들어 매음행위를 조건으로 한 고리대가 성행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우려했음.

● **北, 사상이탈 차단 총력... "한 달 새 보위부 120명 中파견" (4/17, 데일리NK)**

- 북한이 중국에 나가 있는 사사(私事)여행자 중 기독교를 접촉했거나 체류 기일이 지난 주민들을 체포·송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요원들을 대거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기독교를 체제 위협 요소로 인식해 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독교 접촉을 통해 사상적 이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평안북도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사 여행자의 체포를 위해 "한 달 전에 50명, 이달 초에 중국 단둥과 심양 지역으로 각각 20명, 50명이 추가 파견했다"고 언급함.
- 이들에게는 특별 임무로 교회(기독교) 교육을 받았거나 한국 사람과 접촉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 평양으로 송환하는 일이 주어졌다고 함.
- 이처럼 한 달 새 보위부에서 120명의 요원을 대거 파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이 그만큼 주민들의 교회접촉을 통한 사상적 이탈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
- 이에 대해 소식통은 "태양절(김일성 생일, 4월 15일) 휴일을 쇠고 보위부에서 추가 파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교회를 배우고 돌아와 체제를 보위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뿌리 뽑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상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북한 당국은 그동안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화교'에 대해 가족들을 이용한 '유인·납치→평양 송환→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태가 드러나고 있음.
- 평양 소식통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된 보위부의 유인 작전으로 중국 요녕성 지역에서 거주했던 화교 2명에 이어 5명이 추가로 평양에 송환됐다"면서 이들은 남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 방조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함.

● **북,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 급증(4/18,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들어 러시아로 파견되는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이 최근 러시아에 파견할 노동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대상국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방문에 나선 함경북도의 한 주민은 "요즘 중국에 파견하는 노동자보다 러시아에 파견하는 노동자를 더 많이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러시아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종사 업종이 과거에는 주로 벌목공이었던데 비하여 최근에는 건축일꾼, 여성 봉제공, 연해주 지방의 농사일꾼 등으로 매우 다양해진 것으로 보임.
- 이들의 러시아 파견 기간은 보통 3년인데 노임이 중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돌면서 러시아에 파견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 하지만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견 노동자를 선발할 때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사람은 러시아파견 노동자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남한을 비롯해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 친인척이 있거나, 가족은 물론 가까운 친인척 중에 탈북자와 실종자가 있는 사람들도 제외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한 여성은 한 달에 50달러의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국자에게 1년 치 노임에 해당하는 500달러를 고이고 러시아 파견 봉제공으로 뽑혔다"면서 "해외파견 노동자 선발 과정에서 간부들의 비리가 아주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건축 기술자들로 전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 파견되는 북한의 건축 기술자들은 월 700~800달러 수준으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그 중 기술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몫은 100달러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평양 대중교통 뇌물로 부정승차 기승(4/18, 자유아시아방송)

- 4월 들어 각종 정치행사가 꼬리를 물고 진행되자 평양 시내 교통수요가 급증했으나, 운수당국이 파견한 규찰대들이 뇌물을 받고 버스를 먼저 태워주는 부정승차가 기승을 부려 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 동북지방에 체류하고 있는 한 평양주민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궈도전차와 버스 정거장마다 규찰대들이 서서 질서를 바로 잡는다고 난리인데, 오히려 이들이 부정승차를 조장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최근 수도의 교통상황을 전했다.
- 이 주민은 버스를 타기 위해 100미터 이상 늘어선 곳도 많고, 1시간 기다리는 것은 예사이나, 버스 줄을 지키는 질서 유지대들이 담배를 받고 부정승차를 조장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 대중교통은 평양시 운수총국 산하 버스사업소와 궈도전차 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버스 사업소에서는 버스차량이 모자라 남아나는 운전수와 인력들을 전부 각 버스 정거장에 파견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 문제는 이렇게 파견된 규찰대들이 담배나 돈을 낸 사람들을 먼저 태워 사회적 비난거리가 되고 있음.

● 北외무성 "안보리 北인권 논의는 체제 허물려는 것"(4/1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노린 '반북 인권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 대변인은 "미국은 유엔 헌장에 규제된 권능에도 어긋나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궁극에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증언한 탈북자들에 대해 "나라와 인민에게 씻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 도망간 범죄도주자들로서 우리 제도에 반기를 든 테로(테러) 분자들"이라고 주장함.
- 또한 "때가 되면 이 자들의 추악한 정체가 낱알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그 때에는 미국과 서방이 신성한 인권 무대에 테로범죄자들을 데려다 마주앉았던 수치와 창피를 면치 못할 것이며 테로범죄자들과 함께 주권국가를 헐뜯고 뒤집을 모의를 하였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함.

2. 북한인권

- **커비 유엔 조사위원장 "北인권, 6자회담서 다뤄야"(4/15, 연합뉴스)**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북핵 6자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인권문제를 당연히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북한과의 모든 대화와 토론의 기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함.
 - 그러나 "현재로서는 6자회담이 열릴 지가 불투명하다"고 전제하고 "당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세미나에서 커비 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게 마땅하다"며 "상임이사국 5개국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밀실 뒤에서 외교적 타협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 그는 또 "지난달 발간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한국인을 위한 것"이라며 "보고서가 한국어판으로 조속히 번역돼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표명했음.
 -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날 영국 BBC와 미국 CNN, 카타르의 알 자지라 방송 등은 첫머리 뉴스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뤘지만 한국에서는 다섯 번째 뉴스에 불과했으며 건물붕괴 사고 소식이 더 비중있게 취급됐다"고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에 불만을 표시함.
- **미 국무부, 북한 인권·민주주의 증진 사업 공모(4/17, 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15일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사업을 공모한다고 발표함.
 - 지원 대상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옹호하는 사업, 북한으로



- 정보를 유입하거나 북한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는 사업, 서방국가 소속이 아니면서 북한인권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역량 강화 사업 등임.
- 국무부는 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북한의 인권 침해와 강제수용소를 기록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무부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발표한 보고서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들어있는 권고안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음.
 - 국무부는 이 같은 사업들 가운데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거나 북한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는 사업에 많은 단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함.
- "유엔안보리, 北인권문제 해결위한 행동 나서야" <WP>(4/17,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촉구했음.
 - 이 신문은 안보리가 나서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일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의 말을 전하며 이같이 주장함.
 - WP 사설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표결에서 만약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누가 북한의 인권침해 구조를 비호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경고도 함.
 - 이어 지난달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기 일이나 신경쓰라'(mind your own business)고 말한 일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모두의 일'(everyone's business)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조직적 인권유린 당 조직지도부 주도"(4/17,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워싱턴에서 17일 북한인권(Human Rights in North Korea) 토론회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국제한국학협의회(ICKS), 북한인권위원회(HRINK)와 공동주최로 개최됨.
 - 한미연합사령부의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ns) 박사는 지도자 김정은 이외에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 처벌의 최우선 대상으로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연준 제1부부장 등을 지목하면서,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의 최우선 대상은 노동당 조직지도부라고 지적했음.
 - 콜린스 박사는 북한 헌법에도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조항이 분명 있지만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절대복종하는 인권 거부(Human Rights Denial) 정책을 고수하고, 그 인권거부 정책을 실행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기관이 노동당 조직지도부라고 비판함.



- 또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모든 인권유린에 최종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북한 인권 거부 정책의 책임을 묻는다면 240여 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커비 위원장 "北인권 외면하면 유엔 존재가치 없다"(4/17, 연합뉴스)**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유엔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 커비 위원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의 요청으로 열린 비공식 '북한인권 문제 공개토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총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도대체 유엔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나"고 묻고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를 적절한 국제사법제도의 틀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커비 위원장은 방북없이 작성된 보고서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2만6천명에 달하는 탈북자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음.
- 특히 그는 "북한의 인권 탄압은 북한 최고지도부의 용인하에 제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측이 제안한 북한인권사무소 설립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일본은 인권사무소를 자국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소 9개 안보리 이사국이 北인권 ICC 회부 찬성"(4/1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 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데 적극 찬성했음.
- 아울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공식문서로 등재했는데, 이는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 공식 논의사항으로 분류됐다는 의미가 있음.
- 유엔 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오후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관련 비공식 회의에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밝혔음.
- 나머지 6개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했다. 그외 2개국은 "안보리



- 에서 추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나머지 2개국은 유보 입장을 밝힘.
- 당사국인 북한은 회의장에는 나오지 않는 대신 외교관을 보내 회의장 밖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봤음.
 - 이날 회의는 비공식 회의이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유엔 소식통은 "안보리 차원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최소 9개국이 ICC 회부를 찬성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중국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인도네시아서 첫 북한인권주간 개최(4/18,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오는 2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첫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북한인권실태를 알리는 그림전시회, 토론회, 영화상영 등을 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국립과학원(LIPI)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걸어온 긴 여정'을 주제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릴 예정임.
- 북한인권시민연합 측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오랫동안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기 보다는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해왔기 때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주요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인권주간을 시작했다고 밝힘.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또 인도네시아의 국가인권위원회, 아세안 인권위원회 사무국(AICHR)을 방문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음.

3. 탈북자

- 특이 동향 없음.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북-일, 이르면 이달 중 두 번째 정부 간 협상"(4/14, 미국의 소리)
 - 일본 NHK는 북한과 일본이 이르면 이달 중 정부 간 공식 협상을 다시



-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13일 보도했음.
- 일본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재조사 등을 거듭 압박할 방침이며 북한이 재조사를 받아들여 납북자 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의 일부 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임.
- 양측은 3월 30~31일 베이징에서 1년 4개월 만에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재개해 앞으로 북일 간 현안 타결을 위해 교섭을 계속한다는 데 일치했음.
- 이에 따라 양측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다음번 협상을 갖는 방향으로 베이징 대사관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인 것으로 보임.

● **아베, 방일 몽골 대통령과 회담(4/16,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방일 중인 차히야 엘벱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16일 총리 공저에서 회담을 가짐.
- 교도통신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아베 총리가 1년 4개월 만에 최근 재개된 북·일 정부 간 공식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아베 총리는 회담 후 납북자 문제를 협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함.

● **"일본인 100명, 北에 납치됐을 가능성"-UN보고서(4/17, 뉴스1)**

-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비공식 '북한인권 문제 공개토의'에서 인권 문제를 다룬 유엔 토론회에서 일본인 100명 이상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함.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유엔 총회와 안보리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일본은 (북한에 의해) 납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국가 중 하나"라며 "적어도 일본인 100명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프 NGO, 북 주민 3만명에 식량 등 지원(4/18,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민간구호단체 프리미어 위장스(Premiere Urgence)의 소피



- 베노리엘 대북 사업 담당관은 지난 2월부터 황해남도 지역에서 식량 다양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북한 어린이 약 3만 1천 명에게 식량과 건강회복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 베노리엘 담당관은 황해남도의 4개 염소농장에서 생산한 식품을 1만 4천여 어린이를 포함한 약 1만 7천 명의 북한 주민에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 프리미어 위장스는 '황해남도 어린이를 위한 식량 다양화' 사업을 위해서 16만 유로 즉 약 22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전문 농사 장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농법을 교육하며 농산물을 저장하는 온실 창고도 두 곳 더 설치할 예정이다.
 - 베노리엘 담당관은 염소 농장에서 생산한 치즈로 어린이들에게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지원한다면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두 유도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음.
 - 또한 지난달부터는 2년 계획의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식량을 지원하는 지역에 90만 유로, 미화 약 125만 달러를 들여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검사하는 의료기 설치와 지역 보건소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 그리고 건강 자료와 정보기기 확충 등을 진행할 계획임.
 - 약 1만4천 명의 황해남도 주민들이 건강회복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8. 북한동향

- 美 '워싱턴포스트(WP)'의 기사(美 국가안전보장국 다른 나라의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한 달간 녹음·재생 가능)를 인용하며 "미국의 비열한 정탐행위는 인권유린과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며 '미국이야말로 세상 가장 못된 짓만 골라하는 악의 나라,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비난(4.14, 중앙통신/인권유린과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
- 北, 4월15일 평양방송 기자 인터뷰를 통해 역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은 '국정원 첩자로 反北 적대행위 감행' 재차(2.27, 기자회견) 주장(4.15, 평양방송)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9호(4.16)】 대통령이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을 해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며 '남재준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을 수 없다'고 위협(4.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이번 사건의 주범인 남재준을 두둔하며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박OO도 남재준과 똑같은 공범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파쇼탄압과 동족대결의 총본산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남재준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임.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